이낙연 "국가 위기 외면 않겠다"

〈새로운미래 전 대표〉

'정계 은퇴설' 부인… 전병헌 새미래 대표 "초일회가 이낙연 정계 은퇴 요구? 사실 무근"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을 둘러싼 '정계 은퇴설' 등과 관련해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의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를 알려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무도와 거짓이 난무한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린지 오래"라며 "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때때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고 이는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라며 "지난 8월 기존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었고 오는 9월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빠졌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정계 은퇴설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촉발됐다. 이 전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 모임인 '초일회'로부터 정계 은퇴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규완 CBS 논설위원은 전날(22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초일회 소속 김철민 전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더이상 정치 활동하지 마십시오. 항상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더 이상 나서지 말아주십시오'라며 사실상 강제 정계 은퇴를 (요구)했고 (이 전 대표) 본인이 수용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일회가 이 전 대표에게 정계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무근"이라며 "초일회 멤버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경선과 심사로 비명횡사를 당했는데 그런 초일회가 정치적 공백기를 갖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소금까지 뿌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일회가 정계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 "논란 남기지 않도록 해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심위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예규)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뉴시스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 협약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R&D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이 협약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권익현 부안군수,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

"새만금 국제공항 신속 건설하라"

전북건설단체연합회 등

전북건설단체연합회 등은 "최근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에 대해 8개월 동안 재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검토용역 최종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재했다"며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속히 건설하라"는 성명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로써, 잼버리 이후 여러 논란과 극심한 부침을 겪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적정성 재평가를 위해 소비되었던 8개월 이상을 만회하고도 남도록 급물살을 타며 추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가 2019년 1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1순위로 신청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이유는 전북도와 전북도민이 사업비를 떠나 새만금과 전북도 앞날을 위해 국제공항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정부의 평가지표인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에 모두 부합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우리 25만 전북 건설인 가족은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속히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민주 '일본 식민지배 정당화 미화시 공직 진출 금지법' 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정당화 및 미화·왜곡 △찬양·고무·선전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고위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도민과 지역 에너지 계획 비전 발굴

전북자치도, '제1차 도민에너지 기획단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해 도민과 함께 지역 에너지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발굴하는 작업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민 에너지기획단과 함께 지역의 에너지 미래를 논의했다.

지역 에너지 계획은 정부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의무 사항이다.

이번 제5차 지역 에너지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에너지 복지 등 중장기 전략을 포함해 한층 발전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성별, 연령, 직업, 지역을 고려해 총 40명의 도민에너지기획단을 모집했다. 기획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24일 열린 1차 워크숍에서는 에너지 전문가와 연구진이 에너지 이슈동향과 도 에너지 현황, 지역 현안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31일에 열릴 2차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조별 토론과 의견도출을 통해 지역 에너지 미래 비전과 이행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 환경에서 도민들이 직접 에너지전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북의 에너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대학·기업

IT산업 육성 '삼각공조'

산학연관 전북 IT산업 기술교류회

인재양성·취업 연계 방안 집중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2024 제2회 산학연관 전북 IT산업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자치도 디지털산업과, 전북대학교 및 군산대학교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과 전북 IT산업협회, 지역 IT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전북대학교 나승훈 교수의 인공지능 특강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전북 IT 기업들이 그간의 사업 추진 상황 및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성찬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은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실전 공학설계 교육을 통해 지역 I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전북 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과 산학연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IT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라정진 전북IT산업협회장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 디지털산업과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IT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 디지털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디지털산업과를 중심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인재 양성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IT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과 지역 가치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두 대학은 지역 내 초중고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소프트웨어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미화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산업과장은 "지난 7월 디지털산업과가 신설된 만큼 전북 IT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역 내 산학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